

‘광주의 품’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승격될까

면적·관리주체 해결땀 지정 가능

공군부대 이전 시키고 생태 복원땀 전국 브랜드 명성 규제 강화로 시민·토지 소유자들 집단 반발 가능성도



면적 5기 100대 과제인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은 무등산을 전국적인 브랜드로 확립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지원을 받아 관광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주시는 일단 국립공원 승격이 이뤄지면 자연자원조사 및 발굴·전시가 가능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고, 군부대 및 방송통신시설 이설 및 무등산 정상 시민 개방, 생태복원 추진 등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국립공원 지정 시 단점도 적지 않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되면서 규제가 늘어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해지고, 관련 민원에 대한 대응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 국립공원 지정으로 관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광주시가 시민의견 수렴과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이 같은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할 것인지가 관건사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와 협의 과정=광주시는 지난달 2일 환경부와 1차 협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국립공원 승격 및 자연사 박물관 건립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광주시의 위탁관리와 무등산 면적 협소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광주시는 환경부와 협의에서, 한라산과 유사 오동도의 경우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여수시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관리를 맡았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무등산을 관리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시민 이용 불편이나 무등산 정비 참여기회 축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관리를 맡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부는 "최근 경주시도 국립공원 관리권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겼으며 현재 지자체가 운영중인 국립공원도 넘겨받을 방침"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무등산의 면적도 문제로 부각됐다. 무등산의 전체 면적은 30,322km에 불과해 지리산국립공원 등 20곳(6579.85km)의 평균 면적인 329km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가장 규모가 작은 월출산국립공원(56km)보다도 면적이 좁기 때문이다. 면적을 넓힐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국립공원 지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2가지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국립공원 지정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가 있다면 이 같은 선결과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관리 문제는 추후 논의하고, 협소한 면적문제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국립공원 면적에 대한 조건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문제가 된다면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면적을 확대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이달 안으로 환경부와 2차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무등산 정상 공군부대 이전 등 그 외 문제=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 공군부대 이전 및 정상 시민 개방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 지리산 노고단 군부대 철거, 설악산 벼개 철거, 대구 팔공산 공군기지 이전 등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 무등산 정상 10만2034㎡ 부지에 들어선 17동의 군부대 건물 이전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 군부대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광주시는 일단 정상의 일부분만이라도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등산 내 사유지 매입도 골칫거리다. 광주시(27km), 담양군(0.8km), 화순군(2.4km)에 걸쳐 있는 무등산의 총 면적 중 국공유지는 9.96km로 33%에 불과하며, 나머지 67%인 20.27km는 사유지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더라도 토지이용규제는 기존 도립공원과 차이는 없으나, 새로 국립공원으로 승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가에서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사유지를 매입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 광주시당위원장 합의추대?

후보들은 경선 돌입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 출마 의사를 밝힌 강기정 의원(북갑)과 김재균 의원(북을이) 사실상 경선 준비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애초 예상됐던 '합의추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민주당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두 의원은 최근 '경선'을 염두에 두고 각 지역 대의원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등 본격적인 경선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시장위원장 경선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준비위가 구성되면 논의를 통해 향후 경선방법과 날짜 등이 확정된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전에 각 시장·도당위원장 선출을 마칠 방침이어서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은 다음달 11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장위원장 경선 일정이 빠듯하게 잡히면서 경선 출마 뜻을 밝힌 강기정 의원과 김재균 의원의 즉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두 의원은 '합의추대'가 사실상 어려워 것으로 보고 자신들의 지역위원회를 거점으로 대의원 접촉 횟수를 늘리는 등 본격적인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강기정 의원〉 〈김재균 의원〉

이들 광주시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합의추대'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주류(강기정 의원)와 비주류(김재균 의원)에 속하는 두 의원 중 누구도 한치의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측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역 국회의원들이 조만간 회동을 갖고 '경선'보다는 '합의추대'에 대해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두 의원의 이해관계와 대내 역학구조 등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합의추대'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두 의원은 각각 주류와 비주류로 확실히 구분되는데다 당내 역할 등을 감안할 경우 시장위원장 자리를 쉽게 양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두 의원 모두 '합의추대'보다는 '경선' 쪽에 무게를 두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중 대통령 서거1주기 추모

김대중노무현대통령기념사업회 / 김대중대통령서거1주기 광주전남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16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두고 광주시 동구 YMCA 무진관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설치됐다. 분향소는 17일부터 서거 당일인 18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정부, 문화재 반환 실무준비 착수

정부가 간 나옴도 일본 총리가 밝힌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한반도 유래 도서 반환 협상에 대비한 실무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 소식통은 16일 "조선왕실 의궤 등의 반환을 위해서는 한·일 간 협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외교통상부와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실무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원식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박영근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등 17일 회동,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을 문화재의 범위와 일본

으로 반환된 문화재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본측은 문화재 반환을 위한 협상 제의를 하지 않았지만 향후 협상은 한국측에서 외교부와 문화재청, 일본측에서 외무부와 문화재청 등이 주축이 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반환 범위와 관련해 일본은 간 총리 담화에서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圖書)'라고 한정했다. /연합뉴스

광주 출연기관 통폐합·출자기관 민영화로 '가닥'

광주시가 산하 출연기관은 통폐합, 출자기관은 민영화, 공기업 및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오는 20일 조직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28곳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1차 조직혁신위원회에서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한 뒤 2차 위원회에서 기준에 맞춰 이들 기관들을 심

사, 통폐합 및 민영화 대상을 선정한다. 민영화 대상은 우선 광주시가 지분을 출자한 (주)광역정보센터와 (주)수원에너지, (주)한국CES 등으로, 이들 기관의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통폐합은 광주시가 자본금을 출연하고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는 출연기관으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이 1순위가 될 전망이다. (재)광주디자인센터와 (재)광주비엔날레, (재)

광주테크노파크와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전략산업진흥원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광주문화예술회관위원회, (재)공연예술재단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문화재단 설립과 맞물려 통폐합이 논의된다. 광주시는 지난달 초 인수위원·시민·교수 등 11명으로 광주문화재단 설립 TF팀 구성했으며, 조만간 기본안을 확정해 오

20일 첫 조직 혁신위원회 개최 기준 마련 뒤 대상 기관 선정

는 11월1일 재단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공기업·공단 4곳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각 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이 제시된다. 광주시는 통폐합 및 민영화 대상 기관이 선정되면 해당 기관의 이사회 개최 등 결정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까지는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제주도 여행 고객 사은행사 (배우기 두개)

▶ 출발일 : 8/30, 8/31, 9/6, 9/7, 9/13 (탄 5회)

상품1 울레길+新제주 관광명소 탐방 3박4일

₩ 159,000

매회 2명이상 출발보장!!
원주출발항공

상품2 마라도 관광+우도유람선 3박4일

₩ 179,000

매회 2명이상 출발보장!!
최고의 마리도 여행

도항일정 : 8/30(목) 제주출발-제주도 3박4일-귀환-9/1(금) 서울출발, 9/2(토) 제주출발, 9/3(일) 제주출발, 9/4(월) 제주출발, 9/5(화) 제주출발, 9/6(수) 제주출발, 9/7(목) 제주출발, 9/8(금) 제주출발, 9/9(토) 제주출발, 9/10(일) 제주출발, 9/11(월) 제주출발, 9/12(화) 제주출발, 9/13(수) 제주출발

* 2010년 제주도 여행객 100만명 돌파 / 제주도관광객 100만명 돌파 기념 / 제주도관광객 100만명 돌파 기념 / 제주도관광객 100만명 돌파 기념

여행사 투어클럽 0621382-8201 / 010-3813-7810